

# 눈 돌리면 정치 현수막... 시민들은 피곤하다

작년 옥외광고물법 개정되며 난립 광주 횡단보도 등 집중돼 교통 방해 위치 제한 없어 무분별하게 내걸려 민원 한달1~2건서 하루 3건 폭증 원색적 비하 등 정치 혐오 유발도

“요즘 광주에서 조금만 큰 횡단보도나 교차로에는 죄다 현수막이 도배돼 있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우회전을 하다 보면 현수막에 사람이 가려 잘 안 보일때가 많아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김은혜·58·광산구 신장동)

광주 전역이 '현수막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각 정당에서 뿌리는 현수막부터 아파트 분양 광고까지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광주시 광산구 신장동 신장우체국 앞 횡단보도에는 정당 현수막 4개가 줄지어 설치돼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같은 날 광산구 첨단지구 LC타워 인근에서도,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 횡단보도에서도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었다.

현수막에 쓰이는 문구 또한 '연진아, 네 아빠도 검사니?', '진일본색 매국정권', '나라 팔아먹는 일본 1호 영업사원' 등 원색적인 정치적 비방 문구가 버젓이 쓰여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었다. 횡단보도 인근에 현수막이 집중 설치되다 보니 방범CCTV를 가리거나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가리는 등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들불처럼 커졌다. 개정된 법은 정당당 정칙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 경우 15일 동안 어디에 걸든, 어떤 문구를 넣든 불법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허가·신고·금지 제한 대상도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불법광고물 담당자는 최근 들어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이 폭증했다고 한 목소



13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인근 횡단보도에 정당 현수막이 어지럽게 걸려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리를 냈다. 법 개정 이전에는 한달에 1~2건 정도에 그쳤던 불법 광고물 관련 민원 전화가 최근에는 하루에만 3통 꼴로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각 자치구는 민원이 폭증하는 데 따라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조차도 정당 현수막 때문에 유명무실한 단속으로 그치고 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광주에서 단속된 유동광고물 8만 4400건 중 5만 7537건이 불법현수막이었다. 동구 2186건, 서구 1만 7057건, 남구 3800건, 북구 1만 6008건, 광산구 1만 8486건 등이었다. 연간 광주 불법현수막 단속 건수도 2020년 75만 2829건, 2021년 80만 9675건, 2022년 88만 4947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정당 현수막은 걸거하지 못하니 불법 현수막을 단속할수록 정당 현수막만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자치구 관계자는 전했다.

한 자치구 담당자는 "현수막 자체가 합법이다

보니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정당에 연락해 '위치를 옮겨달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조치할 방법이 없다"며 "거기다 정당 현수막 게시 허용 기간인 15일이 지나면 곧장 새 현수막으로 교체해버리니 사실상 현수막이 종일 걸려있고,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차별' 문제도 대두됐다. 일반 현수막은 지정 기사에 10일 동안 도로점용료 등 2만 7650원을 내고 게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예약이 밀려 있어 신청 후 수일에서 수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정당에서는 별다른 비용이나 위치 제한이 없어 정치인들만 일방적인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원색적인 정치 비하 용어가 그대로 담긴 경우도 많아 "정치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련법상 정당 현수막 내용은 '통상적 정당활동'에 해당해야 하는데,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외 표현상의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현수막이 위치 제한 없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면 서 안전사고 위험도 도마에 올랐다. 현수막에 교통 시야가 가리거나 밤중에 현수막 끈이 보이지 않아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0일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여성이 낮게 걸린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14일 세종시청에서 전국 17개 시도 옥외광고물 담당자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정당 현수막 현황과 대응 실태, 추후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달부터는 불법현수막 수거 현황 집계 '정당 현수막' 항목을 추가해 별도 집계해 주의를 깊게 관리할 계획이다"며 "전국 시도 관계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인증샷에 들통 난 불법영업 지산유원지 놀이시설 적발

광주 동구청은 지산유원지에서 모노레일·리프트를 운영하던 A업체가 최근 놀이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한 정황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동구청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21년 12월 지산유원지 일대에 바이킹, 에너지스톡, 범퍼카, 회전목마 등 놀이기구 4개를 새롭게 설치한 뒤,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기도 전인 지난해 6월부터 놀이기구에 이용객을 태웠다.

A업체는 이들 놀이기구에 대해 지난해 6월 안전성 검사를 마쳤으며 올 1월에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터넷 블로그와 SNS 등지에는 허가를 받지 전인 지난해 6~12월 이들 놀이기구를 탄 시민들의 '인증샷'이 올라와 탐미를 잡혔다. 동구청은 인터넷 기록을 토대로 A업체가 놀이기구를 최소 12건 이상 무허가로 운영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 A업체는 "안전성 검사를 마친 만큼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시범 운행 차원에서 놀이기구를 운영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청은 A업체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 광주관광협회 관계자 2명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송치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광주관광협회 소속 A씨와 민간인 B씨 등 2명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 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의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5억원의 광주시 예산을 교부받아 원래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에 예산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협회가 퇴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경영난에 시달리자 지원금을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비, 홍보비 등의 협회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계좌를 이용해 사업비를 사용했으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횡령된 금액도 모두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민간인 집단 희생' 진도·신안·함평 유해 발굴 추진

진실화해위, 전국 14곳 조사

한국전쟁 전후로 진도·신안·함평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에 대한 유해발굴이 추진된다.

특히 진도군 구자도에서는 총 300여구의 유해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경북 경산시 경산코발트 광산사건(3000구)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진도·신안·함평 등 전남 3곳을 포함한 전국 14곳에 대한 유해발굴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유해발굴 수요조사에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1곳을 신청했고, 평가위원들이 시급성과 용

이성, 조사 연관성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특히 신안군 매장추정지의 경우 개발이 예정돼 있어 유해발굴의 시급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굴 예정지인 진도군 의신면 구자도(발굴면적 540㎡)는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순 사이 해남 관할지서 소속 경찰관에게 연행되거나 출두한 해남군 북부지방(해남읍, 계곡면, 마산면, 산이면, 화원면, 화산면, 삼산면) 보도연맹원과 예비검속 대상자들이 구급했다가 끌려가 총살된 곳이다.

이들의 희생사실은 고자도에 끌려갔다가 살아 돌아온 일부 인원에 의해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충북 대 유해발굴센터는 이곳에서 모두 16구의 남성 유해와 총탄, 베타 등 104점의 유류품을 발굴했다.

신안군 임자면(발굴면적 900㎡)은 1950년 8-

10월 대한청년단과 같은 우익활동을 했거나, 이장·경찰·형무소 간수 등 공무원의 가족들이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곳이다. 이곳에는 30~50구의 유해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전쟁 때 민간인들이 인민군에 부역한 혐의 혹은 부역 혐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살해된 함평군 월야면 월야리 일대(발굴면적 450㎡)도 포함됐다.

진화위는 해당 지자체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이번 달 안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해매장 추정지와 발굴지 안내판 설치 사업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반려견 분양 1억 사기 의혹 업체 점주 수사

계약금 받고 석달 넘게 인계 안해

반려견 23마리를 분양한다며 계약금까지 받았다가 석 달이 넘도록 인계를 하지 않고 있는 반려견 분양 업체 점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동부경찰은 지난 7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 있는 반려견 분양업체 점주 A(40대)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반려동물 관련 업체를 운영하는 고소인 B씨와 반려견 23마리를 분양한다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환율이 올랐다는 등 이유로 추가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며 3개월이 지난 지금

까지도 반려견 한 마리도 B씨에게 인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한국에 입국해 가계를 직접 찾아갔는데도 A씨는 인계받은 반려견을 보여주려는 것조차 못하겠다고 막았다"며 "A씨가 되레 강아지 관리비를 내라고 요구하는 등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또 지난 1월 A씨가 명품 반려견인 척 혈통을 속인 채 반려견을 분양했다는 고소장 2건도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실제로 23마리 반려견을 분양할 능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기죄 성립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농막** **옥상스틸방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